

미얀마 군부를 물리칠 힘은 UN과 국제사회에 있지 않다

▶ 관련 기사 3면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물리칠 힘은
UN과 '국제사회'에
있지 않다

3면

낙태약을
무상 도입하고
낙태권 보장하라

12면

제국주의 국가들의
인권 운운이
위선인 까닭

6~7면

미국 남북전쟁 160주년
무엇이 머뭇거리던
링크를 변화시켰는가?

8~9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인종차별은 계급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5면

사유리 모자 '슈돌' 출연
비혼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돼야

4면

[영화평] <당신의 사월>
세월호 7주기,
끝나지 않은
싸움을 이어 가야 할 때

2면



영화평 | 〈당신의 사월〉(주현숙 감독, 2021)

세월호 7주기, 끝나지 않은 싸움을 이어 가야 할 때

박해신

오는 4월 16일이면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7년이 된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현재 진행형인 과제이다.

올해 1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박근혜 정부의 참사 책임 은폐 시도에 면죄부를 주는 결정을 내렸다. 유가족들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17개 의혹 중 대부분을 무혐의 처리한 것이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국가 기구는 7년이 지나도 평범한 사람들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고 있다.

그런 지금, 우리에게 끝나지 않은 길을 굴하지 말고 계속 걸어가자며 따뜻하게 위로하는 영화가 개봉했다.

4월 1일 개봉한 영화 〈당신의 사월〉(감독 주현숙)은 세월호 참사를 지켜본 평범한 사람들이 참사부터 그 이후 수년간 겪은 이야기를 담담하게 담았다. 원래 2019년에 제작 완료해 지난해 개봉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개봉이 1년 늦춰졌다.

“2014년 4월 16일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세월호 참사를 지켜본 평범한 사람들은 그동안 어떤 길을 걸어왔고, 무슨 생각을 해 왔을까?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이 영화는 “2014년 4월 16일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라는 물음을 던지며 출발한다.

세월호 희생자 고故 오준영 학생의 동생 오민영 씨는 “2014년 4월부터 지금까지 반복되는 4월 속에 저의 기억만 계속 가지고 살았는데, 많은 시민들

의 기억을 느낄 수 있다”며 〈당신의 사월〉을 추천했다.

그의 추천사대로 〈당신의 사월〉은 유가족들과 함께 슬퍼하고 투쟁해 온 사람들의 입을 빌려 참사 이후를 돌아 본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과 또래인 대학생(이유경), 세월호 시국선언에 앞장선 인천 모 중학교 교사(조수진), 유가족들이 최초로 청와대 행진에 나선 날 따뜻한 물을 건넨 통인동 카페 사장(박철우), 유가족들 곁을 지켜온 인권 활동가(정주연), 세월호 희생자 고故 문지성 학생의 시신을 최초 수습한 어민(이옥영),

이 5인이 처한 환경은 서로 달랐지만 세월호 참사가 가한 충격은 모두에게 컸다. 출연자 5명은 자신의 경험들을 진솔하게 전달한다. 여러 조각의 다양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관통하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

‘선수의 앞부분만 부표처럼 떠 있는 지금,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하는 무력감, ‘국가는 도대체 어디 있는가?’ 하는 분노, ‘슬퍼만 하는 게 아니라 투쟁을 통해 맞서 싸울 수 있다’는 희망, ‘끝나지 않은 싸움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연대의 마음이 그것이다.

어민 이옥영 씨는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 어떠한 관심도 보이지 않는 국가의 실체를 똑똑히 봤다. 그는 세월호가 침몰한다는 소식을 듣고 어업용 배를 끌고 나갔지만 가라앉는 세월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어업 중 희생자의 시신을 수습했다며 말을 잊지 못한다.

특히, 희생자의 대부분은 경기도 안산의 노동계급 밀집 거주지역에 사는 학생들이었다. 출연자들은 귀한 생명이 눈앞에서 스러지는 모습에 생판 남인 사람들도 내 일처럼 충격과 슬픔을 느끼는데 국가는 그렇지 않았으며 분노했다. 평범한 서민들은 목숨마저 하찮게 여겨진 것이다. 국가는 사고를 막지도, 구조를 하지도 못했고 책임 회피와 적반하장으로 일관했다.

2014년 5월 8일 유가족들이 서울 거리로 나섰다. 유가족들은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한 KBS 보도국장의 망언과 오보에 항의하며 KBS로 향했다. 이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박근혜의 청와대로 향하게 됐다.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의 첫 시작이었다. 넘어가



멈춰 있는 진상규명, 승승장구하는 책임자들 지난 1월 22일 세월호 유가족들은 농성과 집단 삭발로 검찰과 정부에 항의했다

는 침조차 바싹 말랐을 유가족들의 항의 장면에서는 주먹을 꽉 쥐게 된다.

그로부터 2년 뒤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은 박근혜 퇴진 운동에서 선두에 섰다. 영화는 당시 시위 참가자들의 환희를 잘 표현한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 박근혜는 결국 구속됐다.

“여전히 많은 것들이 해결되지 않았다”

그렇게 정권이 바뀐 뒤로 4년이 지났다. 이제 세월호 참사 이후 더 많은 기간이 문재인 정부의 임기에 속해 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뀐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세월호 참사 해결은 거의 아무런 진전이 없다.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무수한 개혁 염원 배신 중 대표 배신이 됐다.

2년 전 제작된 이 영화는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는다. 다만 ‘지금도 해결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은 한다. 그때까지만 해도 세월호 운동 안에서도 현 정부에 대한 기대와 미련이 더 컸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해결은커녕 세월호 참사 책임자를 해경 중요 보직에 앉히고, 참사 당시 부실 수사 총책이던 이성운을 검찰 요직(차기 검찰총장이 유력한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혔

다. 문재인이 배신적 인사를 보면, 진상 규명·책임자 처벌이 이행되지 않은 게 하나도 놀랍지 않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제2, 3의 참사를 방지하고 책임자들을 제대로 처벌하라는 절절한 외침도 외면해 왔다. 정부와 주류 정당들은 언제나 기업의 이윤 보존을 우선해 왔고, 그 속에서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누더기가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결국 유가족들과 참사 피해자들은 타들어 가는 가슴을 붙잡고 다시 차가운 길바닥에서 농성해야 했다.

문재인 정부가 세월호 적폐 해결을 외면하는 동안 우파들은 박근혜 사면·석방을 요구했다. 여당 대표 이낙연도 박근혜 사면을 언급했다.

한편, 우파는 문재인이 지지율 하락에 어부지리 반사이익을 얻으며 재기하고 있다. 그리고 세월호 문제는 2030 청년들이 문재인 정부에 실망하고 등 돌린 배경 중 하나이다.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 남은 과제가 여전히 있음을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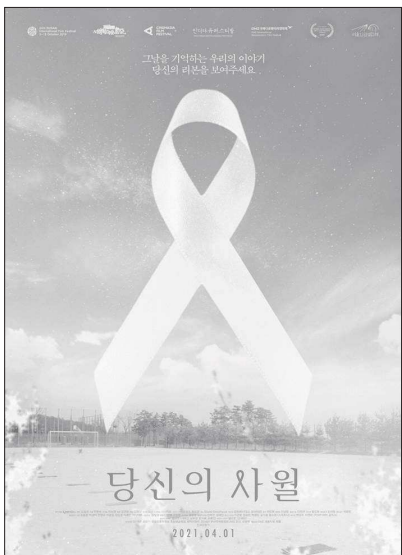
세월호 시국선언에 앞장섰다가 처벌과 징계 위협에 시달렸던 중학교 교사 조수진 씨는 해마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학교 안팎으

로 분투하고 있다. 조수진 씨는 관객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돈이 우선인 이사회에서 사회적 참사는 끊이지 않는다.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이 사회에 맞서 싸우는 것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의 무책임과 무능에 분개했던 사람들 중에는 문재인 정부가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또는 이미 어느 정도 해결했을 거라고) 믿고 관심을 덜 가지는 이들도 있다. 그런 분위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자칫 힘이 빠졌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참사 몇 년 후에도 평범한 사람들이 관심을 지속해 왔음을 보여 주고 위안을 전한다.

〈당신의 사월〉은 세월호 참사를 낳은 시스템이나 대안 등 정치·사회적 측면을 다소 에두른다. 하지만 그럼에도 영화의 주요 출연진들은 모두 던져진 질문들을 외면하지 않고 각자 답하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더 나은 답을 제시하고 성찰하는 것은 늘 그랬듯이 실천과 연결된 문제이다.

지난 7년의 궤적을 돌아보고,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 앞에 놓인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영화를 추천한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olidarity.org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름 _____

휴대전화번호 _____

이메일 _____

소속 (☐ 직장 ☐ 노조 ☐ 대학교 ☐ 종교동교회 ☐ 기타) _____

회비약정액 ☐ 2만 원 ☐ 3만 원 ☐ 4만 원 ☐ 5만 원 ☐ 기타 () 원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 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서명)

작성 후 사진을 찍어 보내 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4909-2026, mail@workersolidarity.org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이름 _____

입금 계좌 (예금주 (주) 레프트미디어)

휴대전화번호 _____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이메일 _____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핸드폰 결제 가능

구독기간 ☐ 1년 ☐ 2년 ☐ 2년 이상 ()년

작성 후 사진을 찍어 보내 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6491-2792, ws@wspaper.org

미얀마 군부를 물리칠 힘은 유엔과 국제사회에 있지 않다

김준효

미얀마 군부는 정국을 온전히 장악하려고 갖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581명(4월 6일 현재)의 목숨을 빼앗고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군부는 ‘합법적 선거를 통한 정권 이양’ 시점을 (예초에 공언한 1년 후에서) 2년 후로 슬쩍 미루고는, 거기까지 가는 ‘로드맵’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군부는 강경 대응에 계속 몰두한다. 군경은 거리 시위를 야만적 폭력으로 진압할 뿐 아니라, 시위대 거점인 대학을 침탈하고 거주 구역을 침탈하고, 시위 부상자를 치료하는 병원 조차 습격하고 있다. 군부의 견제함을 과시하고 대중의 저항 의지를 꺾으려는 것이다.

군부는 현지 실상이 알려지는 것을 매우 경계하고 있다. 군부는 미얀마 대부분 지역에서 인터넷을 차단했고, CNN 특파원과 인터뷰한 사람들을 모조리 연행했다.(군부는 항의에 밀려 구금된 사람들을 6일 석방했지만, 이 특파원은 자신과 인터뷰한 사람들이 모두 연행되는 것을 보고 심층 취재를 포기했다.)

그럼에도 대중 저항은 미얀마 전역에서 계속되고 있다.

시위대는 정당방위를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철판을 잘라 만

든 방패로 무장한 사수대가 거리 행진을 방어하는 한편, 사제 공기총과 사제 수류탄으로 진압 부대와 전투를 벌이기도 한다.

만달레주(州) 북쪽의 깔레시(市)에서는 시위대가 점거한 지방도로를 경찰이 침탈하자 “시민군”이 결성되기도 했다.

승려와 주민들로 구성된 자활 기구들이 부상자를 후송하고 시위 참가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식량을 배급하는 곳도 있다. 4월 13일부터 시작되는 미얀마 전통 축제를 준비하던 기구가 그런 구실을 하는 곳도 있다.

청년·학생들이 이런 행동의 주도자들이다. 이들은 친지·동료들이 군부에 살해·구금되는(구금자는 감옥에서 심증팔구 고문을 당한다) 등 최소한의 생명과 안전조차 위협받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

파업도 이어지고 있다. 공공부문 노동자 투쟁은 군부 자신의 발표로도 참가율이 한때 50~90퍼센트까지 올라갔고, 4월에도 각급 공공기관 2100여 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양곤에서 파업 중인 철도 기관사 코 자우는 한 외신에 이렇게 전했다. “우리 노동자들은 이번 혁명의 엔진 부품입니다. 굶어죽거나 길에서 죽더라도 이 정권 아래로 돌아가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파업의 최전선에는 보건 노동자들이

있다. 이들은 작업장을 이탈해 군경에 쫓기면서도 다친 시위대를 치료한다. 쿠데타 이전에 수립된 코로나19 백신 배포 계획이 이들의 파업으로 완전히 좌초됐다. 쿠데타로만 사회 안정을 도모할 수 있었다던 군부로서는 난처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이런 투쟁들은 군부에 실질적 압박이 되고 있다. 심지어 몇몇 자본가들도 군부에 협조를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군부를 제외한 모두의 목표가 같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점은 현재 운동이 자신의 힘을 온전히 발휘하는 데에서 중요하다.

정치

4월 1일 민족민주동맹(NLD)이 주도하는 임시 국회 ‘연방의회대표자위원회’(CRPH)는 2008년 개정 헌법을 폐기하고 ‘연방민주주의 헌장’을 발표했다.

이는 아래로부터 투쟁의 압력을 받은 결과이기도 한데, 거리 시위대 중 상당수는 이번 항쟁 초기부터 군부의 권력을 보장하는 2008년 헌법을 완전 폐기하라고 요구해 왔다.

NLD는 헌장 선포와 그에 대한 소수 민족 지도자들의 지지를 통해 미얀마 모든 사회 세력의 대변자를 자처하려

고 한다. 이를 위해 CRPH는 소수민족 지도자들에게 장관급 이상의 직책을 보장하고 자치권을 대폭 허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간 NLD의 버마·불교 민족주의 때문에 관계가 좋지 않았던) 카렌족 등 규모가 큰 소수민족 집단들의 지지를 얻어 내려는 것이다.

NLD는 미얀마인들을 두루 아우르는 자신들의 편에서 서서 군부를 압박해 달라고 “국제 사회”에 호소하려고 하고, 대중 운동을 그런 압력의 수단으로만 여긴다. 아웅산 수치와 NLD의 이런 정치 전략은 지난 30여 년 동안 미얀마 군부에 맞선 투쟁이 중대한 패배를 거듭하게 하는 약점으로 작용해 왔다.(관련 기사 본지 357호 ‘미얀마와 민주주의 투쟁’)

미얀마 노동자 대중은 이런 전망과는 독립적으로 자신의 힘을 온전히 발휘해야 한다. 그러려면 무력 정당방위를 꺼리지 말아야 하고, 곳곳의 투쟁들을 연결해야 한다.

그런 투쟁은 노동계급의 힘을 발휘케 해 건설할 수 있다. 양곤대학학생회 연합(UYSU) 소속 대표자 아웅 캉 셋은 이렇게 말한다. “미얀마에는 강력한 노화연대의 전통이 있습니다. … 노동계급이 이 혁명의 동력이 된다면 군부의 경제적·정치적 권력에 계속 도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미래 세대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그리고 미얀마 노동계급이 그 세계를 어떻게 만들지 보여 주고 있다.’”

‘인도주의적 개입’의 위선

미얀마 안팎에서 적잖은 사람들이 “국제 사회”가 개입해 군부를 압박하기를 바란다. 그런 맥락에서 4월 1일 유엔 안보리가 또다시 공문구 수준의 성명만 낸 것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유엔을 비롯한 “국제 사회”는 말로는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말하지만, 그 속내는 온갖 이해득실 계산으로 가득 차 있다. 각국은 미얀마 인근에서의 지정학적 이익을 도모하고 자국 자본주의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골몰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의 면면을 봐도 이를 알 수 있다.

3월과 4월 두 차례 안보리를 주도한 영국은 버마(미얀마)를 식민 점령할 당시부터 이 지역에 적잖은 이해관계가 있다.(영국은 효율적인 식민지 통치를 위해 미얀마 내 민족 갈등을 의식적으로 조장한 책임이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오늘날에도 영국은 미얀마의 주요 교역국의 하나이고, 영국 석유기업 BP는 미얀마 영해 석유 시추의 큰손이다. 영국이 올해 하반기에 쿼일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을 파견하려는 것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한편 아시아에 걸린 자국 자본주의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

프랑스는 냉전 종식 직후부터 미얀마 영해가 속한 뱅골만을 기웃거려 왔다. 뱅골만에서 벌어지는 대(對)중국 해상 연합 훈련에 몇 년째 개근하고 있는 것도 그 일환이다. 프랑스 석유기업 토탈은 미얀마 영해 천연가스 시추 산업의 최대 지분 소유자의 하나고, 프랑스 미디어 기업 비방지는 미얀마 국영 방송국 MRTV의 송출에 관여한다. 프랑스는 미얀마 의복 산업의 주요 수입국이기도 하다.

이런 세력들이 바라는 것은 미얀마 내부 상황이 너무 불안정해지지 않는 것이다. 그 ‘안정’을 누가 이끄는지는 부차적인 문제다. 1988년과 2007년 미얀마 군부가 민주주의 시위대를 학살할 때 이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미국의 최대 관심사는 미얀마가 중국과 지나치게 가까워져 ‘인도-태평양 전략’의 구멍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미국이 미얀마 문제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도 그런 전략에 도움이 되는 수단이 무엇일지 기회주의적으로 가능하는 중이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과 함께 ‘쿼드’에 속한 인도·일본·호주의 대응도 제각각이다. 인도는 3월 27일 미얀마 국군의 날 행사에

대표단을 공식 파견했고, 호주·일본은 미얀마 군부와 막후 협상을 벌이고 있다(《포린 폴리시》).

이들 열강의 진정한 관심사는 미얀마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중국에 맞선 파워 게임을 포함해) 자국의 영향력과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미국·프랑스·일본·인도·호주가 미얀마 앞바다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연합 해상 훈련에는 앞다퉈 최신 전함을 끌고 동참했지만, 이번 사태에서는 제각각인 이유이다.

유엔 안보리 성명이 나오는 과정에서 중국이 서방 국가들과 갈등을 빚었다 해서 중국이 미얀마 군부에 일체감을 느끼는 것도 아니다. 중국 역시 자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최우선 이해관계는 중국-미얀마 국경 지역 안전과 인도양으로의 교두보 확보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국경 지역에서 세력이 큰 카친족의 독립 운동을 오랫동안 후원하는 한편,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으로 NLD 정부와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 때문에 중국은 미얀마 군부와 관계가 은근히 불편하다. 그러면서도 미얀마 국경에 인접한 신장 위구르 지역을 통제하는 데에서 미얀마

군부의 간접적 도움을 얻기도 했다.

요컨대, 중국은 ‘경주마 모두에 베풀’하는 도박사의 태세다. 자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도움이 된다면 누가 주도하든 새 정부를 편들려 할 것이다.(관련 기사 본지 355호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첨예해진 미·중 갈등 속에서 바라본 미얀마 쿠데타’)

이런 배경을 보면 “국제 사회” 지도자들이 설령 미얀마에 합심해 개입할 수 있다 해도, 미얀마인들의 염원에 따라 군부를 압박할 태세가 아닐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자국의 이해관계와 영향력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지금껏 말로나마 미얀마 군부를 비난했던 것조차 언제든 뒤집을 수 있다.

유엔에 대한 기대도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실에서 다른 국가에 강제로 개입할 수 있는 힘은 유엔 기구가 아니라 유엔을 좌우하는 안보리 소속 강대국들(특히 미국)에서 나오고, 그 강대국들은 자국의 이해관계를 언제나 먼저 셈하기 때문이다.(유엔의 역사에 관해서는 본지 웹사이트에 실린 ‘유엔은 왜 침략 전쟁을 막지 못하나?’를 보시오.)

창립 이래 거듭 유엔은 주요 열강이 분열해 있을 때면 마비됐고, 열강의 뜻이 하나로 모였을 때는 제국주의 이익

추구의 ‘깃발’(명분)을 제공해 왔다. 유엔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을 옹호했고, ‘인도주의적’ 개입으로 소말리아를 축대발로 만들어 놓았다. 하지만 열강이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세계 곳곳에서 만행을 저지를 때는 무기력했다.

이런 자들의 ‘인도주의’, ‘보호 책임’, ‘민주주의’ 운운에 기대를 걸어서는 안 되는 까닭이다.

한편, 문제인 정부의 행태도 문제다. 예컨대 한국 대기업 포스코가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자 문재인 외교부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반박하고 나섰지만, 포스코의 지원 덕분에 한국 조선 기업이 최대 크기의 군함을 미얀마 해군에게 판매했다는 (4월 6일) MBC의 보도가 있었다.

미얀마 항쟁을 지지하는 한국의 선의의 시민들이 “국제 사회”의 외교전에 기대를 거는 것은 목이 마르다고 소금물을 들이키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 보다는 군부에 맞서 영웅적으로 싸우는 미얀마 대중이 자신의 투쟁과 정당방위 수단을 발전시켜 진정한 민주주의의 기구들을 창출하기 시작하기를 응원해야 할 것이다.

사유리 모자 ‘슈돌’ 출연

비혼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돼야

이현주

비혼 출산을 한 사유리 씨가 KBS 육아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이하 ‘슈돌’)에 아들과 함께 출연하기로 하자, 일각에서 “비혼 출산을 부추긴다”며 청원(청와대 국민청원, KBS 시청자권익센터 청원)을 올리며 하차를 요구했다.

일부 보수 개신교·우파 단체들은 여의도 KBS 사옥 앞에서 사유리 모자의 출연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런 목소리가 큰 지지를 받고 있지는 않다. KBS 측은 사유리 모자의 출연을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식 답변했다.

비혼 가정의 모습이(이들을 동성적으로 그리는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유명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한 것은 분명 변화된 가족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물론 사유리가 잘 알려진 연예인에 외국인이라서 사람들에게 더 관대하게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현실에서 많은 한부모·미혼모 가정은 여전히 커다란 차별과 편견에 시달리고 있다.

사유리 모자 출연을 반대한 이들은 비혼 출산이 “비정상적” 방식이며 남녀 간의 결혼과 그 사이에서의 출산만을 ‘정상’이라고 본다.

이렇게 편협하고 보수적인 가족관은 오늘날 변화하는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지난 20년 동안 이혼, 한부모·미혼모 가구, 동거, 사실혼 등이 상당히 늘었다. 한국에서 혼외 출산율은 여전히 매우 낮지만, 서구에서는 혼외



문도민 기자 취재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한부모·미혼모 가정에 대한 편견과 낙인을 강화한다

출산율이 40퍼센트에 이른다.(2018년 기준OECD평균 40.7퍼센트)

동시에 결혼과 출산에 대한 대중의 의식도 변화해 왔다. 가령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2012년 22.4퍼센트에서 2020년 30.7퍼센트로 늘었다.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의 효과 중 하나는 한부모·미혼모 가구에 대한 낙인과 편견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정상적’이라고 여겨져 온 남녀 결혼에 기초한 핵가족 모델은 인류 역사에서 보편적이지 않았다. 일부일처 가족제도는 계급사회가 발전하며 함께 등장했다. 계급사회 이전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은 모두 폭넓은 성적 자유를 누렸고, 남녀 간의 관계만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지지

도 않았다.(관련 기사: 본지 352호, ‘비혼은 인공출산 안 된다: 비혼 출산은 왜 부당하게 차별받는가?’)

한편, 사유리 출연에 반대한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같은 보수 기독교 단체는 비혼 출산만이 아니라 여성의 낙태권과 동성애, 동성 결혼 등에도 반대해 왔다. 결국 이들이 반대하는 것은 여성과 성소수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과 성을 선택할 권리인 것이다. 이들은 숨막히게 보수적이고 차별적인 성 도덕을 설파한다.

논란 속에서도 경기도지사 이재명이 사유리의 ‘슈돌’ 출연을 응원하는 입장을 SNS에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좋은 일이다.(주류 정치인 중에 사유리의 출연을 공개 지지한 사람은 현재까지 이재명이 유일하다.)

지난해 말 사유리의 출산이 논란되자 민주당은 비혼 출산 관련 법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껏 아무것도 진척시킨 게 없다. 가령 비혼 여성의 인공출산은 여전히 법적인 뒷받침을 받지 못한다.

건강가정기본법

보수 개신교·우파 단체들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도 결사반대하고 있다.

여성이족부는 건강가정기본법(건강법) 개정을 올해의 추진 과제로 밝힌 바 있고, 이와 관련해 민주당 남인순·정춘숙 의원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해 둔 상태다.

이 개정안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구성된 가족만을 가족으로 보는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의 협소한 가족 개념을 삭제하고, ‘정상 가족’만을 건강한 가정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건강 가정’이라는 용어도 수정하기로 했다.

그간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비혼·동거 등의 커플이나 가구는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각종 사회복지나 주거 제도 등의 혜택에서 제외돼 왔다. 따라서 이런 방향의 법 개정은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한국교회총연합 등 보수 개신교·우파 단체들은 건강법 개정안이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의도”라며 길길이 날뛰고 있다. 개정안이 동성 결혼 지지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데도 말이다. ‘가족’ 개념이 확장되는 흐름 자체를 막고자 하는 의도일 것이다.

법 개정에 반대하는 우파들이 있고,

공식 정치에서 우파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이기에 민주당이 이런 개정을 진지하게 추진하려 할지는 의문이다.

사실 건강법 개정안은 ‘누구든 가족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게’ 한다면 서도 동성 결혼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는 이 개정안이 매우 온건한 개선책임을 보여 준다. 남인순 의원은 논란이 되자 건강법 개정안이 ‘동성혼을 인정하려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했는데, 우파들이 동성 결혼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동성 결혼 지지에 선을 그은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다. 동성 결혼도 합법화돼야 한다.

한편 가족 개념에 대한 법 규정 개선뿐 아니라, 한부모·미혼모 가정에 대한 실질적이고 대폭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미혼모·한부모의 빈곤과 불평등은 심각한 문제로 제기돼 왔다. 대부분의 미혼모·한부모는 홀로 생계를 책임지며 아이도 돌봐야 하는 처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문제인 정부의 대책은 필요 수준에 턱없이 못 미치거나 생색내기에 불과한 수준이었다.(관련 기사: 본지 345호, ‘미혼모·한부모 눈물 닦아주기에 턱없이 부족한 정부 대책’)

미혼모·한부모들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면 국가가 양육과 돌봄을 책임져야 한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고, 주거의 질도 개선해야 한다. 장시간 노동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

이런 조치가 시행될 수 있으려면 대중의 필요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자본주의 체제와 그 수혜를 입는 권력자들에 대한 도전이 필요하다.

무슬림 혐오·편견 드러낸 조처

대구 북구청은 이슬람 사원 허용하라

임준형

대구 북구청이 일부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두 달 가까이 이슬람 사원 건축을 막고 있다.

지난 2월 16일 북구청은 경북대학교 서문 근처 대현동에 건축 중이던 이슬람 사원 건축주에게 공사를 중지하라고 통보했다. 일부 주민들이 건축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자 바로 공사를 중단시킨 것이다. 351명이 탄원서에 서명했는데, 대현동 주민만을 대상으로 받았다고 가정해도 1.8퍼센트에 불과하다. 이들은 ‘대현·신격동 주민 일동’ 명의로 현수막을 걸고 있다.

이들이 반대하는 사원은 61평 면적에 2층 높이로 지어질 예정이었다. 경북대 소속 무슬림 유학생과 연구자들이 이용하려고 오랫동안 십시일반 돈을 모았다고 한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북구청의 조처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2월 18일 대구참여연대가 성명을 발표해 북구청에 공사 중단 조처를 철회하라

고 요구했다. 3월 8일에는 경북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가 “해당 사원에서 무슬림 학생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편에 서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의결했다. 또 3월 18일에는 대구참여연대, 경북대 민주화교수협의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조 경북대지회, 인권운동연대가 공동성명을 내 북구청과 대구시가 이슬람 사원 건축 중단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치안 불안”?

사원 건축 반대 서명자 측은 이슬람을 혐오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탄원서 내용은 이슬람에 대한 편견에 가득차 있다.

탄원서는 “이슬람사원 신축시 반경 1.5킬로미터 주거밀집지역의 안전보장이 불확실”해진다고 시작한다. 심지어 “주민들의 생명보장권”을 요구한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치안이 심히 걱정된다”고 말했다. 무슬림을 잠재적 범죄자, 테러리스트 취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근거가 무엇인지는 단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편견일 뿐이다.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 무슬림이 다수인 나라 출신 외국인 범죄율은 2012~2017년 내내 내국인 범죄율에 미치지 못했다(인구 10만 명당 검거 인원 기준,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형사정책의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IV): 외국인 밀집지역의 안전현황과 정책과제》(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방글라데시와 인도네시아는 미국보다도 낮았다. 경북대의 무슬림 유학생들이 주로 이 4개국 출신이고, 이슬람 사원 건축주 6명은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인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보다 무슬림 인구가 많은 유럽은 어떨까? 2017년 유럽 전역에서 시도되거나 성공한 테러 공격은 모두 205건인데, 그중 ‘지하드주의 공격’은 33건으로 전체의 16퍼센트밖에 안 된다.

오히려 같은 해 영국에서는 이슬람 혐오 범죄가 1200건이나 일어났고 독일에서는 이슬람 혐오 범죄가 1년에

1000건 이상 벌어진다. 이런 천대와 차별이 무슬림 중 극히 일부를 테러리즘으로 이끄는 것이다. 약 16억 명에 이르는 전 세계 무슬림을 이런 극소수와 동일시한다면 이슬람을 획일체로 보는 편견이거나 악의적인 왜곡일 것이다.

말로만 중재

탄원서는 소음과 냄새, “집단적 의식행위”로 인한 불편도 사원 건축 반대 이유로 내세운다. 그러나 사원 건설 장소에서 불과 50여 미터 떨어진 곳에 교회가 있다. 그런데 유독 이슬람 사원만 문제 삼는 것이 이슬람 혐오가 아니면 무엇인가?

한편, 우익과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사원 건축 반대 측에 합세한 듯하다. 〈뉴스민〉 보도를 보면 사원 건축 반대 집회에서 주최 측이 준비한 설명자료에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태아사랑운동연합, CFE인권위원회, 바른인권여성연합, 케이프로라이프 등의 대구·경북 지역 조직이 명시돼 있었다. 이들은

전교조 합법화, 동성애, 낙태, 비혼출산 합법화, 차별금지법 제정 등에 반대하는 활동을 해 온 단체들이다.

3월 24일 대구 북구청은 이슬람 사원 건축주와 건축 반대 측을 불러 중재 회의를 열었다. 건축주는 애초 2층으로 지으려던 사원을 1층으로 낮추겠다는 타협안까지 냈지만, 건축 반대 측은 무조건 건축 철회 입장을 고수해 30분 만에 결렬됐다.

이 자리에서 북청은 건축주에게 사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물었다고 한다. 사실상 건축 반대 측을 편든 것이다. 이게 무슨 중재인가! 건축주는 다른 곳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고 한다. 매우 당연한 우려다. 북구청 자신이 건축허가를 내줬고 건축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인정한 것을 되돌린다면 우파와 보수 기독교 단체들은 더욱 기세 등등해져서 다른 곳의 사원 건축도 훼방하려 들 것이다.

대구 북구청은 이슬람 사원 건축 중단 조처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인종차별은 계급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지난해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을 계기로 영국 정부가 꾸린 인종차별 조사 위원회가 ‘영국에는 체계적 인종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발표해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큰 분노를 자아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이 보고서의 핵심 문제를 비판한다.

영국 정부 산하의 ‘인종·민족 격차 조사위원회’가 최근에 낸 보고서는 언뜻 보기에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용의주도한 정치적 공격이다. 그 목적은 “체계적 인종차별” 개념을 지우는 것이다. 스티븐 로런스의 죽음을 계기로, 1999년에 발표된 ‘맥퍼슨 보고서’에서 런던 경찰청이 체계적으로 인종차별적이었음을 인정한 것은 인종차별 반대 운동의 커다란 승리였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를 낸 토니 슈얼과 보수당 정부는 이를 뒤집으려 한다.

수많은 비판자들이 지적하듯이 이 보고서는 지적으로 완전히 부정적이다. 필자는 한 가지 쟁점만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바로 인종과 계급을 대립시키려는 시도다.

보고서는 여러 차례 이렇게 주장한다. “상이한 집단이 갖는 유리함과 불리함의 근원은 복잡적이다. 많은 경우 민족뿐 아니라 사회적 계급, ‘가족’ 문화, 지리적 입지와도 연관돼 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흑인과 아시아인의 높은 코로나19 사망률과 인종차별의 연관성을 부인한다. 위원회는 이

렇게 주장한다. “코로나19 사망 위험이 더 큰 것은 주로 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더 크기 때문이다.”

“흑인과 남아시아인의 감염 위험이 더 높은 것은 인구밀도와 빈곤 수준이 높은 도시 지역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집단은 보건·교통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직종에 종사하거나, 감염에 더 취약한 나이든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사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흑인과 아시아인이 많이 죽는 것은 노동계급의 가난한 부분에 속해 있기 때문이지 인종차별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위원회가 말하는 “불리함”을 계급, 인종, 지역 등의 요인들로, 서로 무관하게 취급하고 쪼갤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이는 계급에 대한 몰이해다. 계급은 “요인”이 아니다. 계급은 관계다. 위대한 마르크스주의 역사가 제프리 디스티 크로익스는 “계급은 사회구조 안에 착취가 반영되는 방식”이라고 했다.

자본주의 사회는 착취하는 자와 착취당하는 자의 계급 관계로 짜여져 있다.

자본주의 사회는 사회의 생산적 자원들을 지배하는 자본가들과, 지불되지 않는 잉여노동으로 자본가들이 챙길 이윤을 만들어 내는 노동자들로 나뉘어 있다.

착취

그러나 착취는 균등하게 작동하지 않는다. 인종차별이나 성차별, 성소수자 차별 등 온갖 차별로 인해 더 취약한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은 더 적게 받고, 더 많이 일하고, 더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흑인 공산주의자 클로디아 존스는 1949년에 쓴 탁월한 글에서 착취와 억압이 서로를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존스는 미국 흑인 여성들에 대해 이렇게 서술했다.(존스는 “깜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당시에 이는 사회적

으로 용인되는 표현이었다.)

“깜둥이 여성은 노동자이자 깜둥이이자 여성이기에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차별받는 층이다.”

따라서 인종과 계급을 대립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계급(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착취 관계라는 의미에서)은 인종차별을 통해 작동한다.

인종차별과 그 밖의 차별들은 그저 일부 노동계급 사람들만 취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다. 노동계급 전체를 약화시킨다. 노동자들을 갈라놓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 자체가 이런 분열 지배의 사례다. 이 보고서는 자신이 말하는 “백인 노동계급”과 흑인·아시아인들을 이간질한다.

예를 들어 이 보고서는 이렇게 밝힌다. “런던을 벗어나면, 다차원적인 불리함이 존재하는 지역들에서 발견되는 가장 큰 집단은 가난한 백인들이다.”

영국은 계급 사회인 동시에, 2011년 조사를 보면 87.2센트가 백인이고 12.9퍼센트가 소수 인종인 곳이다. 따라서 가난한 백인들의 수가 더 많은 것은 당연하다.

위대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학자 W.E.B 듀보이스는 백인들로 하여금 자신이 흑인보다 우월하다는 인종차별적 환상을 갖게 하는 것이 백인들을 계속 가난하게 하는 한 가지 기재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더 깊은 의미에서 계급은 인종을 압도한다.

단결된 노동계급은 자본주의 내의 온갖 차별과 그것의 뿌리를 쓸어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려면 인종차별에 맞서 가장 단호하게 투쟁해야 한다.

그리고 듀보이스가 말했듯이, 세계적 수준에서 본다면 “노동자 해방은 노동자들의 기본적 다수를 이루고 있는 황인종, 갈색 인종, 흑인의 해방이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749호 / 번역 강미영



사진 출처: 기이 스톡단

“모든 흑인의 목숨은 소중하다” 4월 3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경찰법 개혁 반대 시위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이어 가고자 한다. 이 전통은 처음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시작했고, 레닌·룩셈부르크·트로츠키가 물려받아 전해 준 전통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전쟁·빈곤·기아·착취·차별·환경파괴 등은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난민·기후 위기·팬데믹 등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사회주의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시스템(이하 체제)이자 이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과 사상이다.

소련의 경험은 노동자 혁명이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소련 고립의 결과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였다. 그 뒤 동유럽과 북한 중국에서 스탈린주의 정당들이 소련과 비슷한 체제를 건설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노동자들이 국가자본주의와 시장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지지한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노동계급은 사회의 부(富)를 창출하는데도 그 생산 수단과 방법을 통제하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권력이고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이다. 오직 노동계급 자신의 대규모 투쟁으로써만 차별과 착취로 점철된 체제를 끝낼 수 있다.

노동계급은 사회의 다수이고 사회주의 운동의 주축이다. 노동자들이 생산에서 하는 핵심적 구실 덕분에 그들은 다른 사회세력과 달리, 생산을 멈춰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 존재 조건의 집단성 덕분에 노동자들은 생산 수단과 생산 방식을 집단적으로 조직해 새 사회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개혁만으로 충분치 못하고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조건을 지킬 수 있고, 자신감과 투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은 차별과 착취, 기후 위기 같은 환경 재앙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이 사라지려면 새 사회가 건설돼야 한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 새 사회로 가는 길은 없다. 지금의 의회·군대·경찰·사법기구를 노동계급이 인수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기구들은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발전했고,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에 맞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금의 체제는 수리하거나 개혁할 수 없고, 해체되고 없어져야 한다.

노동계급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이뤄진 노동자 평의회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 국가가 그것이다.

의회 활동은 기껏해야 현 체제를 반대하는 선전에 쓸모 있을 뿐이다. 물론 우리는 공식선거에서 자본가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진보·좌파 후보를 지지한다. 또한 자본가 정당들의 공식 정치 지배로부터 독립을 촉진하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 그러나 지금의 체제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 자신의 대규모 행동뿐이다.

국제주의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이고, 세계 노동계급은 전쟁, 기아, 기후 위기, 팬데믹 같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사회세력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은 국제적이어야 하고 만국의 노동자를 단결시켜야 한다. 역사를 보면, 외교라는 수단을 통해 제국주의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다른 나라 노동

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반대로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대립시키는 것 일체를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열강의 세계 지배와 이를 위한 그들의 각축과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 북한 핵무기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는 핑계일 뿐이고, 진정한 쟁점과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등 서방의 북한 간섭과 압박을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하에서 억압받는 민족들의 자결권을 지지한다. 또한 민족자결에 반해 제국주의에 의해 분단된 한민족의 재통일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주민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평등과 해방

자본주의는 민족,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고용형태(정규직 / 비정규직), 그 밖의 다른 차이들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평등을 지지한다. 우리는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권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차별과 천대를 반대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유입 억제를 반대한다. 특히, 우리는 거짓에 근거해 비난받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천대와 혐오를 반대한다.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등 차별과 천대를 받는 집단 모두가 권리를 누리기 위해 조직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한을 반대한다.

갖가지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투쟁은 사회주의적 투쟁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인 한편, 노동자 권력(사회주의) 없이는 차별로부터의 해방(민주주의)이 불가능하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전투적이며 계급투쟁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하며, 계급협력주의를 거부한다. 또한 우리는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한다. 즉, 노동조합 운동은 차별과 부당함에 반대하는 투쟁 일체를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착취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착취의 결과에 저항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노조 지도층의 역할은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에게서 독립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현장 기반 운동이 건설돼야 한다.

혁명적 당

노동자 혁명이 성공하려면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혁명적 당으로 조직돼야 한다. 그런 정당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일상적 저항 조직들 안에서 활동함으로써만 건설될 수 있다. 노동조합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혁명적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

운동 내의 비혁명적 경향들을 그저 비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개혁주의 지도자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다른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정치가 당면 투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실제로 입증해야 한다. 공동전선을 통해 혁명적 사상과 실천의 우수함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종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 줘야 한다.

우리는 이런 당의 초석을 놓으려 무진애를 쓰고 있다. 위에서 설명된 우리의 기본 입장이 대체로 수긍되면 우리와 함께합시다.

제국주의 국가들의 인권 운운은 위선이다

김영익

이 글은 4월 2일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발제문을 개정·증보한 것이다.

3월 18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미국과 중국의 2+2 고위급 외교 회담이 열렸다. 이 회담은 양측의 첨예한 설전으로 이목을 끌었다. 미국의 국무장관과 백악관 안보보좌관, 중국의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외교부장이 일반적인 외교 관례에 어긋날 정도로 격하게 논쟁한 것이다. 양측의 쟁점은 광범했는데, 그중 인권 문제가 포함돼 있었다.

미국 국무장관 앤터니 블링컨은 신장과 홍콩 등지에서 벌인 중국 정부의 조치에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 회담 전날에 미국 바이든 정부는 중국 시진핑 정부가 홍콩 민주주의와 자치를 훼손했다면서 중국·홍콩 관리 24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국 측의 비난에 대해 중국공산당 정치국원 양제츠도 응수했다. 그의 발언을 요약하자면, 영화 ‘친절한 금자씨’의 대사 “너나 잘하세요”였다. “미국의 인권이 최저 수준이다.” “미국에서는 흑인들이 학살당하고 있지 않냐.” 그는 인권·민주주의 문제로 월가워부하지 말라며, 미국식 민주주의와 인권은 보편적 기준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에는 미국식 민주주의가 있고, 중국에는 중국식 민주주의가 있다.”

이 회담 이후 바이든 정부는 《2020년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 중국 정부가 신장 위구르족을 ‘집단 학살’한다고 적시했다. 미국·캐나다·유럽연합 등이 위구르족과 홍콩 문제를 이유로 중국에 제재 조치를 내렸고, 중국이 이에 맞불을 놓았다.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점증하는 무력 시위, 반도체·5G·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경쟁과 맞물려 ‘인권’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전임 트럼프 정부 하에서도 미·중 갈등이 심화됐지만, 당시에는 민주주의나 인권 문제가 주된 쟁점이 아니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 말기부터 달라졌다. 지난해 트럼프 정부의 국무장관 폼페이오 등은 중국을 가리켜 민주주의·자유와 대립되는 전체주의, 권위주의 체제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정부는 2020년 5월에 내놓은 《대중국 전략적 접근》 보고서 등 공식 문서에서도 중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중국 공산당이 인간의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 추구라는 미국의 절대 신념과 양보할 수 없는 인간 권리라는 미국의 가치에 도전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 정치인들은 최근 부쩍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대결이라고 포장한다. 바이든 정부는 이 방향으로 더 밀어붙이려 한다. 특히, 동맹을 결집시키려는 맥락에서 말이다. 대선 기간에 바이든은 대통령에 취임하면 “국제 민주주의 정



3월 18일 알래스카에서 미·중 관리들은 ‘인권 문제로 설전을 벌였으나, 이들 중에 대중의 시민적 권리에 진정 관심 있는 사람은 없다

상회의’를 개최하겠다고 공언했다. 중국·러시아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에 대적해 미국 주도 하에 동맹국과 파트너들의 결집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호응해, 영국 보리스 존슨 정부는 기존의 G7을 확장해 D10(Democracy 10), 즉 ‘민주주의 10개국 협의체’를 결성하자고 제안했다.

제국주의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민주 vs 반민주 갈등이 아니라 제국주의적 갈등이다. 제국주의는 자본축적의 동역학에서 비롯된 것으로, 특히 자본주의 강대국들 사이의 경쟁이 지배적인 특징인 자본주의의 최신 단계이다. 이 경쟁은 경제적 형태뿐 아니라 정치적·군사적 형태도 띠며, 궁극으로는 제국주의 국가 간 전쟁으로 귀결될 수 있다. 레닌과 부하린이 강조했듯이, 제국주의의 핵심은 강대국들 사이의 지배권 다툼에 있다.

미국은 오랫동안(20세기 후반부) 제국주의 세계체제의 서열 맨 꼭대기를 차지했지만, 21세기부터는 이 지위에 도전하는 새로운 제국주의 경쟁자 중국 등을 상대로 꼭대기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팬데믹 속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제 격차는 더 줄어들었다. 지난해 중국 국내총생산(GDP)이 처음으로 미국 GDP의 70퍼센트를 넘었다. 이 추세라면 2028년에는 중국의 GDP가 미국을 추월할지 모른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물론 중국 경제가 앞으로 순탄하게 성장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리고 설사 중국 GDP가 미국 GDP를 따라잡더라도, 미국의 세계 패권이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2020년 현재 중국의 1인당 GDP는 여전히 미국의 6분의 1 수준이다. 중국의 GDP가 미국을 추월해도 미국과 중국의 1인당 GDP 격차는 상당할 것이다. 군사력과 세계 금융

지배력 등에서도 미국은 한동안 중국에 비해 우위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지정학적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음은 분명하다. 바로 그런 맥락 속에서 양측의 인권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은 민주주의나 인권 문제를 국내외에서 자국의 행동을 합리화하거나, 상대방을 공격하는데 동원하고 있다. 사실 양국 지배자들은 모두 인권 문제에서 매우 위선적이다.

바이든은 중국을 비난하며 인권을 언급할 자격이 없다. 그가 구상하는 소위 ‘민주주의’ 진영에 포함되는 각국 정상들 중에는 팔레스타인 억압으로 악명 높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무슬림 살해 방조자이자 농민 탄압자 인도의 모디, “브라질의 트럼프”라는 극우 대통령 보우소나루처럼 인권·민주주의와는 동떨어진 강성 우익 정부 수반들이 있다.

중국 같은 권위주의 국가에 비해 서구 국가가 표현의 자유 등 시민적 자유를 더 많이 보장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서구 지배자들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그런 자유를 제한하려고 해온 역사로 점철돼 있다. 바이든만 해도, 경찰이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시위대를 향해 총격을 벌여 논란이 되자 ‘몸통 대신 다리를 쏘라’고 했다. 그는 중남미 이민자들을 막는 국경 통제 강화도 지지해 왔다. 바이든 취임 직후에 텍사스주 이민자 아동 구금 시설이 재가동된 것도 볼 수 있다.

그리고 대중이 염원하는 민주주의와 서구 지배자들이 실행하는 민주주의는 다르다. 예컨대, ‘통치 과정에 대한 대중의 능동적 참여’를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으로 꼽는 명분과는 달리, 서방 지배자들에게는 ‘기업 활동의 자유’가 실제로 더 중요하다. 즉, 이들

의 민주주의에서 그 사회적·경제적 핵심은 이윤과 재산, 소수 권력이다. 2003년 민주주의를 강요하겠다고 이라크를 점령한 미국 부시 정부가 가장 열을 올린 일이 석유와 군사기지와 민영화 등 규제 완화였던 까닭이다. 또한 부시 정부가 보기에 이라크의 민주주의에는 미국에 ‘No’ 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돼서는 안 되므로 대중적 지지가 약한 소수 친미 정치인들에게 권력을 몰아 줬다.

한편, 중국의 인권 문제들 가운데 특히 신장 위구르족 문제를 보자. 신장 위구르족 문제는 중국의 한족 제국주의 민낯을 보여 주는 민족 문제다. 마오쩌둥 혁명 직후부터 중국은 위구르족 등 현지 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장 지역을 차지하고 그곳에 한족을 대거 이주시켜 왔다.

오늘날 중국 신장 자치구에 사는 위구르족 1000만 명은 개발 과정에서 소외되고 온갖 천대를 당하면서 한족 제국주의에 저항해 왔다.

중국 정부는 위구르인들의 저항을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여긴다. 신장 지역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요충지인데다, 자결권 문제에서 위구르인들에게 양보하면 다른 소수민족들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배가 약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의 위구르인 탄압 실상은 여러 차례 폭로돼 왔다. 예컨대, 2017년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중국 당국의 내부 문서를 입수해 많은 위구르인들이 ‘전문 직업훈련 시설’이라는 수용소에 갇혀 있다고 폭로했다. ICIJ는 이 시설들에 최대 100만 명까지 수용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위구르족이 억압받고 있음을 부인하기 일쑤다. 마지못해 일부 탄압 사실들을 인정할 때도 그것이 서구 정부들의 치안 정책과 별반 다르지 않은 조치라고 하거나, ‘직

업훈련 정책’을 비롯한 반테러 정책 덕분에 신장에서 테러리즘과 이슬람 극단주의가 사라지고 안정과 번영이 가능해졌다고 주장한다. 많은 위구르인들이 바로 그 극단주의자로 몰리고 ‘안정과 번영’에서 배제돼 있다.

얼마 전 중국 외교부장 왕이는 이렇게 말했다. “각국은 문명과 전통이 다르고 발전 단계도 상이하며 인권에 대한 이해도 저마다 강조점이 다르다.” 중국의 인권 기준은 서구와는 다르니 내정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다.

중국 당국의 인권 상대주의는 당장에 중국 헌법과도 모순된다. 이에 따르면 중국 국가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노선”을 따르고 중국 사회는 “사회주의 초급 단계”에 이르렀다고 한다. 즉, 중국이 서구 사회보다 본질적으로 진일보한 사회라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정말로 사회주의 사회라면 시민적·정치적 권리들은 서구의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보다 훨씬 신장돼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런 권리들이 체계적으로 억압당하고 있다. 민주주의 없는 사회주의는 가짜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 신장 문제를 처음으로 ‘집단 학살과 반(反)인도적 범죄’로 분류했다. 그러나 미국이 신장 위구르 문제로 중국을 비난하는 것은 엄청난 위선이다.

2001년 9·11 공격 이후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에 돌입할 때, 위구르 문제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지금과 사뭇 달랐다. 중국 신장 지역에 인접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면서, 미국은 중국 정부와 협력해, 이슬람 근본주의와의 연계가 의심되는 위구르인들을 감시했다. 미국과 유엔은 위구르인 저항단체들을 테러 조직으로 규정했고, 소위 ‘테러리스트’들을 가두는 미국 관타나모 수용소에는 한때 최소 20명 이상의 위구르인들이 갇혀 있는 게 확인됐다.

그런데 이제 와서 바이든을 비롯한 미국 정치인들은 위구르인들을 걱정하는 척한다. 실로 악어의 눈물에 불과한 것이다.

악어의 눈물

미국이든 중국이든 자본주의 강대국 지배자들은 자국의 대외 정책과 관련된 이데올로기 문제를 중시한다. 자신들의 대외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국민 대중이 자국의 대외 정책을 지지하고 단결하게끔 촉진할 이데올로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틈만 나면 민주주의, 인권을 운운하는 까닭이다. 그러나 이런 얘기들은 모두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합리화이고 궤변이다.

우리는 자본주의 세계 속에서 서로 경쟁하는 열강 그 어느 쪽도 지지하지 말고 제국주의와 자본주의 자체를 반대해야 한다. 그리고 천대받는 대중의 민주주의와 그들의 인권을 위해 아래로부터의 노동계급 투쟁의 전진을 지향해야 한다.

미얀마 쿠데타에 관한 강대국들의 위선

최근 미얀마 상황에 대한 자본주의 강대국들의 대응에서도 이들의 위선이 드러난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같은 자본주의 열강 중에 미얀마 쿠데타와 이에 맞선 저항을 놓고 미얀마 대중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쪽은 없다.

중국 정부는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3월 27일 미얀마인 100여 명이 군경의 진압으로 목숨을 잃었지만 중국 정부는 같은 날 열린 ‘미얀마군의 날’ 열병식에 대사관 인사들을 참석시켰다.

이는 중국 정부가 미얀마에 인접한 국경의 안정과 인도양 진출 통로로서 미얀마의 지정학적 가치를 우선하기 때문이다. 한때 이 목적을 위해 아웅산 수치 등 과도 좋은 관계를 맺으려 노력했다.

미국 등의 서구 정치인들은 미얀마 군부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해친다고 비난하고 군부의 유혈 진압을 규탄했다. 그러나 그들은 전에 미얀마 군부가 권력을 유지하는 것을 기꺼이 인정했던 자들이다. 예컨대, 미국 오바마 정부는 미얀마 군사 정부의 ‘민주화’ 노력을 긍정하며, 미얀마가 체제 전환의 모범국이라고 칭송한 바 있다.

지금도 미국 등은 미얀마 군부를 압박하는 데 신중하다. 앞에서는 군부를 비난하면서도, 뒤에서는 대중국 포위라는 지정학적 목표를 위해 미얀마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더 이익이 될지를 두고 냉혹하게 주판알을 튕기고 있을 것이다.

즉, 중국이든 미국이든 미얀마에 진정 바라는 것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도움이 되는 ‘안정’이지 미얀마 내 민주주

의와 인권 신장이 아니다.

유엔은 다를까?

유엔 등이 중심이 된 “국제 사회”가 미얀마에 압력과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잖다. 그러나 유엔의 핵심은 안보리로, 이런 허울좋은 제국주의 국제기구에 개입을 호소하는 것은 미얀마인들의 해방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유엔은 처음에 제2차세계대전의 승전국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국제 질서를 조성하려고 합의해 만든 기구다. 당시 유엔의 기본적 설계는 미국 국무부가 담당했다.

이렇게 생래적으로 유엔에는 제국주의적 질서가 반영돼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노동계급을 비롯한 피억압 대중한테 소용없거나 해롭거나 둘 중 하나였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유엔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거나 군사 개입을 정당화했다. 유엔은 결성된 지 얼마 안 된 1947년 시온주의 국가(이스라엘)를 인정하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분할해 팔레스타인인들을 고향에서 내쫓고 땅을 빼앗는 것을 방관했다. 그리고 유엔은 1950년 한국전쟁의 미국 참전, 1990~1991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처럼 미국의 전쟁을 유엔의 이름으로 정당화해 왔다.

혹여 유엔이 자국의 이해관계에 상충되는 결정을 할 듯하면, 제국주의 국가들은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이를 무력화했다. 예컨대 미국의 베트남 전쟁이나 러시아의 체첸 침공에 대해 유엔은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유엔 회원국들의 관계는 결코 평등



그동안 미국은 미얀마 군부의 권력이 유지되는 ‘민주화 로드맵’을 지지했다. 2012년 오바마와 미얀마 군사정권 대통령 테인 세인의 정상회담

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시민 참여가 확장된들 유엔이 “자본가들의 신성동맹”임(유엔의 전신인 국제연맹에 대한 코민테른의 비판)은 바뀌지 않는다. 유엔은 고쳐 쓸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유엔 안보리 국가들의 의견이 엇갈려 있어 지금 미얀마에 유엔이 관여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설사 강대국들의 타협이 이뤄져 유엔이 미얀마 상황에 개입한다면, 유엔의 구실은 군부와 민족민주동맹(NLD) 사이의 협상 중재일 공산이 크다(경향신문) 2021년 4월 3일). 그렇다면 “가장 가능성이 큰 결론은 NLD와 군부가 공존했던 쿠데타 직

전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이는 군부의 권력이 연장되는 것일 뿐이다.

일각에서는 미얀마에 유엔의 ‘보호책임’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호책임’은 “인도주의적 개입”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이 ‘보호책임’ 원칙이 최초로 적용된 사례는 바로 2011년 리비아 개입이었다. 독재자 카다피에 맞선 리비아인들의 항쟁이 일어나자, 나토는 유엔 결의에 따라 리비아인들을 보호하겠다고며 군사력을 동원했다. 그러나 1만 건 가까운 나토의 공습 속에 항쟁은 엉뚱한 방향으로 뒤틀렸다. 리비아 사람들 머리 위로 나토 전투기가 떨군 폭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이후 리비아인들은 기나긴 혼돈 속에 여태껏 서방 개입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반면, 같은 해 바레인에서 일어난 반독재 대중 항쟁은 친미 국가인 사우디까지 개입해 유혈 진압됐지만, 유엔을 비롯한 “국제 사회”는 이를 수수방관했다.

미얀마 노동계급은 다른 천대받는 사회집단과 소수민족 등을 이끌고 스스로 해방을 쟁취할 잠재력을 갖고 있고 지금 군부에 맞서 용감하게 싸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일관된 국제주의 정신에 따라 “국제 사회”(즉 제국주의 열강)의 개입이 아니라 노동계급의 잠재력이 실현되기를 바라야 한다.

‘인도주의적 개입’의 경험

미국 등 서구와 유엔의 “인도주의적” 개입이 결코 현지에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상시키지 않았던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

20세기 후반에 서구 열강들은 지역 독재 정권과 전쟁을 할 때가 많았다. 예컨대 1982년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격돌한 포클랜드 전쟁이 있었고, 특히 냉전 해체 후 1990년대와 2000년대 초에 미국의 일방주의가 강화되면서 이런 전쟁 행위를 정당화하고자 “인도주의적” 목적을 강조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 미국이 주도해 독재자를 응징한다며 벌인 1990~1991년 이라크 전쟁으로 수많은 이라크인들이 희생됐다. 이후의 10년이 넘는 경제 제재로 이라크에서 100만 명이 넘게 사망했는데, 그중 절반이 아동이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2003년 미국의 점령으로 이라크는 말 그대로 생지옥이 됐고, 그 지옥에서 작은 괴물인 ‘이라크 · 시리아 이슬람국가(ISIS)’가 잉태됐다.

2001년 9 · 11 공격 직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 그때 미국의 침공이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해방과 제대로 된 “국가 건설”을 가능케 할 것이라는 주장이 많았다. 그러나



2010년 아이티의 유엔군. 유엔군과 미군은 아이티에서 군사적 필요와 부유층 보호를 중시했고, 구호 활동에서는 완전히 무능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아프가니스탄 곳곳을 파괴하고 수십만 명을 살해했다.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은 해방되기는커녕 기나긴 전쟁 속에 절망해 왔다.

1990년대 미국이 주도해 나토는 “인도주의”를 표방하며 발칸반도 내전에 개입했다. 인종 청소를 당하는 사람들을 구한다는 명분으로 말이다. 그러나 이 전쟁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수많은 민간인들이 나토 폭격으로 죽게 만들었다. 그리고 나토의 군사 개입은 민족 간 갈등을 오히려 악화시키고

새로운 인종 청소가 시작되는 계기가 됐다. 나토가 인종 청소의 원흉으로 지목한 세르비아 독재자 밀로세비치는 정작 나토의 공습이 아니라 2000년 가을 대중 항쟁으로 축출됐다.

‘보호책임’이든 ‘인도주의적 개입’이든 그 어떤 이름을 붙여도 제국주의 국가들이 현지 국가에 압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전쟁을 벌이는 것은 강패짓이고,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런 것이 용인되면 제국주의 열강은 누가 악당인지 아닌지를 자의적으로 선택해 훨씬 쉽게 무력을 행사할 것이다.

바이든 정부와 북한 인권 문제

바이든 정부는 중국 인권을 문제 삼는 한편, 북한 인권에 대한 비판도 강화했다. 미국 국무부는 《2020년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발표하며, 북한 인권 상황을 “세계 최악 중 하나”라고 지목했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의 새 대북 정책에서 인권이 필수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북한에는 인권 문제가 실재한다. 북한이 사회주의가 아니라 관료적(전면적) 국가자본주의 사회여서, 그리고 김정은 등의 북한 관료들이 착취를 강화하려고 억압적 조치들을 체계적으로 시행해서다.

그러나 앞서 얘기했듯이, 서구 정치인들이 북한의 인권을 문제 삼을 자격은 없다. 무엇보다, 대북 인권 공세는 미국과 서유럽의 제국주의적 대북 압박이

지속 · 강화되는 맥락 속에서 제기되고 있다. 즉, 북한 인권 문제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대북 제재와 군사적 압박을 합리화하는 데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등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문제 삼아 제재를 가하고 위협을 강화해 왔다. 그러나 국제적 맥락에서 미국은 핵 위협과 인권 등 모든 문제에서 북한과는 비교가 안 되는 진정한 강패 국가다.

북한 인권은 서방의 개입과 압력으로 개선될 수 없다. 제재는 평범한 북한 대중의 삶을 더 궁핍하게 만들고, 서방의 제국주의적 대북 압력 행사와 개입은 북한 내부에서 정권과 인민 대중의 결속을 키워 북한 노동자들이 자력 해방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오히려 차단할 뿐이다.



팬데믹 때문에 대북 제재를 완화하자는 제안이 나오지만, 미국은 요지부동이다. 그러면서 북한의 “지독한 인권 상황” 운운한다

미국 남북전쟁 160년 노예제를 끝장낸 혁명적 전쟁

매튜 쿡슨

미국 남북전쟁이 발발한 지 160년이 지난 지금, 그 전쟁의 의미를 돌아보고 이면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짚어본다.

미국 남북전쟁은 1861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민병대가 섬터 요새의 정부군 기지를 포격하면서 시작됐다. 일각에서는 남북전쟁이 주(州)의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남북전쟁은 사회를 조직하는 서로 다른 두 방식 사이의 충돌이었다.

유�혈낭자한 이 전쟁의 핵심 쟁점은 노예제였다. 전쟁은 4년 동안 지속됐고, 당시 3000만 인구 중 60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남부연합으로 알려진 남부주 지배자들은 노예제를 방어하려고 싸웠다. 북부주 지배자들은 그들의 계급적 이해관계 때문에 ‘자유 노동’ 이데올로기를 지지했다.

북부는 결국 혁명적 전쟁을 수행했기 때문에 승리했다. 북부는 노예제 폐지를 약속했고, 수많은 흑인들이 자신의 해방을 위해 행동에 나섰다. 흑인 여성과 백인 여성도 투쟁의 중요한 일원이었다.

1775~1783년 미국 혁명 전쟁으로 미국은 영국 지배자들을 미국에서 쫓아냈다. 하지만 이 신생 독립국은 상이한 두 가지 형태로 조직됐다.

북부에서는 새롭게 확장된 공장으로 노동자들이 몰려들고 소농들이 땅을 경작했다.

노예 소유주들은 남부를 지배했다. 1860년까지 노예 400만 명이 잔혹한 감시인의 눈조리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세계 시장에 수출할 면화를 매년 100만 톤씩 생산했다.

남부와 북부의 지배층 사이에는 깊은 분열이 있었다. 북부 산업 자본가들은 영국 기업들에게서 자신들의 시장과 제품을 보호해 줄 관세를 원했다.

반면 남부 노예 소유주들은 자유무역을 원했다. 관세는 영국의 면직 산업으로 면화를 수출하는 데에 큰 타격을 줄 것이었기 때문이다.

노예제폐지 운동

19세기 대부분의 기간 동안에는 남부의 이해관계가 우세했다. 여기에 일조한 민주당은 노예 소유주를 대변하는 정당이었다.

하지만 노예제에 대한 분노로 노예제폐지 운동이 부상했다. 많은 “자유노동” 지지자들은 남부의 권력을 축소시키길 원했다.

공화당은 1850년대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출현했다. 그리고 1860년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 에이브러햄 링컨이 승리했다.

처음에 링컨은 남부에 유화적이었다. 링컨은 “노예제가 현존하는 주에서는 노예제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선언

했다.

그럼에도 남부주들은 링컨의 당선을 자신들의 힘에 대한 위협으로 여겼다. 남부의 7개 주(사우스캐롤라이나, 미시시피, 플로리다, 앨라배마, 조지아, 루이지애나, 텍사스)가 미국 연방에서 탈퇴했다.

섬터 요새 포격 이후 링컨이 정부 권력을 회복하려고 군대를 동원하자, 버지니아, 아칸소, 테네시, 노스캐롤라이나주도 연방에서 탈퇴했다.

북부에서 주들이 민병대를 결집시키고 남성들이 새로 결성된 군대에 자원하는 등 뜨거운 분위기가 일었다.

사람들은 노예제폐지 집회에 몰려와서 해방된 노예인 프레더릭 더글러스나 19세의 웨이커교도 활동가 안나 디킨슨 같은 연설가들의 연설을 들었다.

사태의 논리

더글러스는 이렇게 썼다. “미국 사람들과 워싱턴 중앙 정부는 한동안 외면할지도 모르지만 거스를 수 없는 사태의 논리는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 것이다.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노예제에 맞선 전쟁이라는 것을 말이다.”

처음에 링컨은 “온건한” 입장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링컨은 노예제를 지지하는 북부의 민주당과 연방에 남아 있는 노예주들과 타협했다.

링컨은 남부의 노예제를 지지하는 조지 B 맥클레런에게 군을 지휘하게 했다. 1861년 8월 한 장군이 남부군에 맞선 군사적 조치로서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자 링컨은 이 조치를 뒤집었다. 심지어 링컨은 군부대에서 일하다 온 것이 아니라면 도망쳐 온 노예들은 남부연합의 노예 소유주들에게 되돌려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온건한 방법들은 실패했다. 그리고 전쟁은 발발한 지 18개월이 지나고 교착상태에 빠졌다.

노예제폐지론자들은 더 급진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링컨에게 노예 해방을 선언하고 흑인 병사들을 북부군에 입대하게 하라고 요구했다.

이것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었다. 갈수록 더 많은 탈주 노예들이 연방군에 자원해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었다.

링컨은 처음에 망설였지만 승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확신이 서자 이를 전적으로 수용했다. 링컨은 1862년 맥클레런을 해임하고, 1863년 1월 1일 남부연합에 가담한 주들의 노예를 해방한다는 노예해방선언을 발표했다.

이제 연방군은 흑인의 입대를 받았으며, 수많은 흑인들이 입대했다.

전쟁이 끝날 무렵 북부군 병력 250만 명 중 10퍼센트가 흑인이었다. 군대 내 흑인의 존재는 그들을 접한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 놓았다.

미시간주의 한 부사관은 이렇게 썼



남북전쟁에 참전한 흑인 병사들 자신의 해방을 위해 싸운 평범한 사람들이 전쟁을 결판짓는 데에서 결정적인 구실을 했다

다. “저주받은 노예제에 관해 알면 알수록 그것을 최종적으로 파괴하는 과정을 더 기꺼이 인내하게 된다.

“노예제폐지는 노동을 존엄하게 만들 것이다. 그 사실만으로도 모든 것이 혁명적으로 뒤바뀔 것이다.”

변화

변화한 북부군은 노예 소유주의 권력을 파괴할 총력전을 펼쳤다.

남부 흑인들은 남부 지배층에게 더 큰 걱정거리가 됐다. 수많은 노예들이 플랜테이션을 떠나 연합군에 가담했다. 이는 남부군의 보급 능력을 위협했다.

북부군이 노예를 해방시키고 플랜테이션을 불태우며 남쪽으로 진군하자, 노예 소유주들은 어쩔 수 없이 1865년 4월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이 투쟁은 링컨의 생각을 바꿔 놓았다. 하지만 링컨의 행동만으로 노예가 해방된 것은 아니었다. 미국에서 노예제가 폐지된 것은 남부에 맞선 혁명적 전쟁에 참가한 수많은 평범한 흑인과 백인들의 행동 덕분이었다.

혁명가 카를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했다. “신세계가 거둔 가장 큰 승리는, 구세계에서는 영웅들이나 성취했을 만한 위업을 평범한 사람들이 신세계의 사회적·정치적 조직 하에서 일궈 낼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는 것이다.”

북부 승리의 한계

해방된 노예들은 북부의 승리를 축하했지만 평등 염원은 잔인하게 내동댕이쳐졌다.

북부가 승리하고 며칠 후 한 남부연합 요원이 에이브러햄 링컨을 암살했다. 링컨의 후임자인 앤드루 존슨은 노예제 폐지를 제외하고는 남부에 어떤 변화도 감행하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존슨은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고, 뒤이은 1868년 대선에서 윌리엄 S. 그랜트가 승리했다.

그랜트는 남부에서 “재건” 정책을 관철시켰다. 남부를 점령한 북부군은 옛 남부 지배층이 주나 지방 정부를 장악하지 못하게 했다. 해방된 노예들이 투표했고 수많은 흑인들이 주정부와 연방의회와 상원에 선출됐다. 처음으로 가난한 흑인과 백인 아이들을 교육하는 학교가 열렸다.

옛 농장주들은 쿠 클럭스 클랜(KKK)단의 탄생을 지원했다. 이 집단은 해방된 노예와 이들을 지지하는 백인들에게 테러를 자행했다. [그러나] 북부군이 주둔하는 동안 이런 움직임은 흑인들이 쟁취한 성과를 뒤집을 수 없었다.

하지만 북부는 남부의 토지 소유권

을 건드리려고 하지 않았다. 토지는 여전히 옛 노예 소유주들의 수중에 남아 있었다. 과거에 노예였던 사람들 대부분은 생계를 위해 옛 노예 소유주들에게 “자유 노동”을 팔아야만 했다.

1870년대 중반에 북부 자본가들은 남부 농장주들의 힘을 제압했다고 믿었다.

군대는 철수했고 KKK단은 더 많은 테러 행위를 마음껏 벌일 수 있었다. 이런 테러와 토지 소유주들의 경제적 힘으로 옛 지배층은 다시 지배를 확립할 수 있었다. 이들은 흑인과 수많은 가난한 백인들의 투표권을 폐지했다.

이에 저항하는 기층의 움직임이 있었다. 하지만 남부의 흑인들은 1950~1960년대의 평등권 운동이 벌어지기 전까지 투표권을 되찾지 못했다. 산업 자본주의와 “자유 노동”이 미국을 지배하게 됐다. 하지만 인종차별은 이런 형태의 체제의 불가결한 일부였고, 흑인의 권리는 곧 짓밟혔다.

그럼에도 평범한 사람들의 대중 행동은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함을 보여줬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위크) 2248호 번역 김지혜

무엇이 머뭇거리던 링컨을 변화시켰는가?

브라이언 켈리 미국 역사가

에이브러햄 링컨은 미국 남북전쟁에서 중심적인 인물의 하나였다. 노예제를 폐지한 인물로 추앙받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통합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노예 해방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다음은 2012년 스티븐 스피버그의 영화 <링컨>을 계기로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에 실린 기사를 일부 번역한 것으로, 미국 역사가 브라이언 켈리가 미국 내전 당시 링컨의 변화와 링컨이 했던 구실을 균형 있게 살펴본다. 영화 내용에 관한 부분은 생략했다.

남북전쟁이 끝날 무렵 노예제폐지론자인 리디아 마리아 차일드는 링컨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그의 모든 결점에도 불구하고” 노예제에 맞서겠다는 그의 의지만큼은 “꾸준히 성장해 왔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링컨을 비판한 많은 확고한 노예제 폐지론자들도 링컨이 자신의 보수성을 넘어 성장했음을 인정했다. 역사가 에릭 포너가 최근에 말했듯이 이것이 “움직이는 링컨”의 모습이었다. 링컨 자신도 이렇게 말했다. “내가 사태를 좌우했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고백하건대 사태가 나를 좌우했다.”

남북전쟁이 시작된 지 반년, 유럽 지배계급은 이 전쟁의 혁명적 의의를 한사코 무시하고 있었고, 링컨은 경계주[미합중국에서 이탈하지 않은 노예주] 노예 소유주들의 충성을 되찾는 데에 희망을 걸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사태 전개를 면밀하게 추적해 온 예리한 관찰자 카를 마르크스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남부와 북부의 투쟁”이 “다른 아닌 두 사회 체제의 투쟁”이며 “어느 한 체제가 승리할 때에만” 끝날 수 있다고 했다.

공격

마르크스가 보기에 상층의 정치와 노예들의 자주적 활동, 북부군의 전략 변화는 하나로 이어진 역동적인 전체였다. 흑인 · 백인을 불문한 최상의 노예제폐지론자들과 마찬가지로 마르크스도 노예제를 정면 공격하기를 주저하는 초기의 링컨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전쟁 초기에도 마르크스는 링컨에 대한 노예제폐지론자들의 불만을 공유했다. 링컨이 경계주 노예 소유주들의 “이익, 편견, 정서에 유화적이고,” “미봉책”을 펴고, “적들의 가장 취약한 약점이자 악의 근원인 노예제 자체를 제대로 타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부가 군사적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해서 (엥겔스를 포함한) 다른 이들이 절망에 빠졌을 때, 마르크스는 링컨의 꾸준한 발足を 인정하며 “사태가 결정적인 구호, 즉 노예해방을 선포하는 쪽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마르크스의 확신은 1862년에 입증됐다. 링컨은 노예해방선언을 통해 자신의 전향을 알렸을 뿐 아니라 전쟁의 판도를 크게 뒤바꿨다. 마르크스는 기뻐하며 다음과 같이 썼다. “지금까지

우리가 목도한 것은 내전의 제1 막에 불과하다. 이것은 헌법적 교전이었다. 이제 혁명적 교전이라는 제2 막을 앞두고 있다.”

링컨을 온전하게 평가하기 위한 소재들은 스피버그의 영화 <링컨>이 다루는 시기[1865년]보다 2년 앞선 바로 이 시기에 있다. 물론 영화에 나오는 시기의 상층 정치 세계에서도 온갖 이야깃거리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근저에는 북부군 일선 지휘관들을 극적으로 변화시킨 노예들의 자주적인 행동이 있었다. 노예들은 기회만 되면 북부의 전선으로 탈주했다. 그들은 그들에게 해방자로 비친 북부군한테 중요한 군사 정보를 제공했다. 포로로 잡힌 북부군을 탈출시키는 무수히 많은 작전을 조직하기도 했다. 나중에는 북부군에 입대해 자신의 옛 주인들과 전쟁을 벌이려 했다. 이렇게 입대한 사람들이 20만 명에 달했다.

압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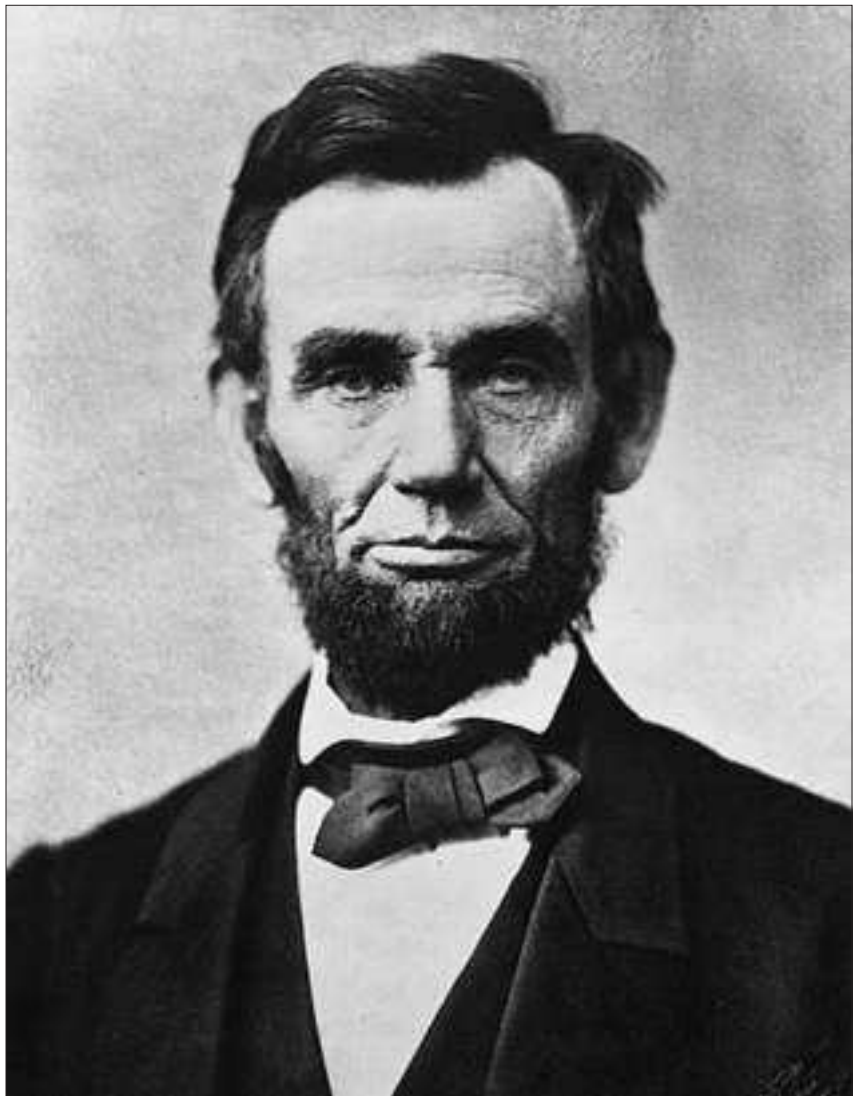
이런 상황에 부응할 필요성을 느낀 북부군 지휘관들은 공화당과 머뭇거리던 링컨 행정부에게 노예해방 조치를 과감하게 밀어붙이라고 압력을 넣었다. [급진적 흑인 사상가] W.E.B 듀보이스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북부군이 남부로 진입하자 그들은 해방군이 됐다. 전혀 계획하지도 않은 일이였다.” 오늘날 역사가들은 노예들이 전시에 쉴 새 없이 일으킨 소요(듀보이스는 이를 노예들의 “총파업”으로 묘사했다)의 중요성을 명료하게 이해함으로써 이 전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주저하는 혁명이였다. 그 혁명은 반민주적인 노예 소유 지배계급에 맞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혁명이였다. 노예 소유주들은 살아 남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걸고 싸울 태세였다. 링컨은 그의 성향에도 불구하고 그를 둘러싼 사건들의 힘에 떠밀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노예제에 내리는 벼락”을 동원했다. 그러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였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비록 더뎠지만 링컨은 도전에 응했고 퇴행적인 사회 질서에 맞서 미국 부르주아지의 승리를 완수했다. 그러나 그 승리는 앞서 노예들과 그들의 동맹들이 잉태한 것이었으며, 수많은 북부군 병사들의 목숨과 희생을 대가로 얻어낸 것이였다.

마르크스는 남부연합의 패배를 축하하며 이를 세계사적 전진이라 했다. 이전에 마르크스는 제1인터내셔널을 대표해 1864년 재선을 축하하는 서한을 링컨에게 보냈다. 미국에서 노예 소유주들이 주도하는 “반혁명”이 일어났다는 소식에 유럽 노동자들은 그 반란을 분쇄하는 것이 자신에게도 이롭다는 것을 뚜렷하게 느끼고 있으며, “과거에 성취한 성과들의 운명도 대서양 건너편의 저 거대한 충돌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마르크스는 썼다.

노예제의 붕괴는 미국 내에서 새로운 계급 정치의 기회를 열어 줬다. “노예제의 죽음에서 생겨난 새로운 활기”는 8시간 노동을 둘러싼 새로운 행동뿐 아니라, (훗날 우리가 알게 되는) 중대하고 처절한 파업과 다른 투쟁들로



표현됐다. 옛 노예들은 자신들이 얻은 자유에 의미를 부여하려고 이런 행동에 나섰다.

마르크스가 미국 내전을 “지금 시대의 가장 큰 사건”이라고 본 것은 옳았다. 노예제가 심어 놓은 인종 간 분열을 극복할지도 모를 새로운 노동계급 운동을 위한 토대가 노예제의 패배로 마련됐다는 지적 또한 옳았다. 남부연합이 승리했다면 흑인 노예제는 미국 전체로 확산됐을 것이고 북부 백인 노동자들이 쟁취한 얼마 안 되는 민주적 권리는 무력화됐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 전체에 자본주의가 공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면서 또 다른 전망이 제기됐고, 궁극적으로는 그 전망이 실현됐다. 서부의 인디언 학살 전쟁

이 최종적으로 완수됐고, 산업 기업이 성장했으며, 그들의 요구하에 새로운 노동계급 운동이 군사적으로 짓밟혔다. 미국 제국주의가 극적으로 팽창했고, 노예들과 그 후손들은 새로운 야만적 폭력 · 인종차별 · 착취 체제에 다시 종속됐다.

노예 소유주인 경쟁자들을 패배시킨 부르주아지는 기대에 가득 찬 노동계급이라는 새로운 위협에 직면했다. 노예해방의 시기를 지난 노예제폐지론자들과 급진주의자들은 노동자 운동에서 갈 길을 찾고 인종 평등을 위한 투쟁을 지속했다. 링컨이 게티스버그에서 약속한 “새로운 자유의 탄생”은 이윤을 위한 새로운 각축전 속에서 결국 실현되지 않았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본 미국 남북전쟁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전쟁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면밀하게 추적했다. 1848년 혁명이 패배한 후 혁명의 경험으로 급진화한 많은 독일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노예제폐지 운동에서 중요한 구실을 하거나 나중에는 북부군 장교가 되기도 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미국으로 건너간 급진적인 독일인들과 연락하고 미국과 유럽의 언론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사태를 추적했다. 1860년 1월 미주리주(州)에서 일어난 노예 반란이 실패한 후 마르크스는 [엥겔스에게] 이렇게 썼다. “현재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일은 … 존 브라운[노예 반란 지도자]의 죽음을 계기로 시작된 미국의 노예 해방 운동과 러시아 농노 해방 운동이네.”

브라운 처형 이후 1860년 대선 동안 전쟁 위기는 심화했다. 반(反)노예제 연합으로 탄생한 공화당은 링컨을 후보로 출마시켜 승리를 거뒀고 이 승리는 곧장 남부 노예주들의 “아메리카 연합” 분리 · 독립 선언으로 이어졌다. 1850년대 초부터 주요

일간지 <뉴욕 트리뷴>의 런던 통신원 일을 했던 마르크스는(이 신문의 편집자는 공산적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었다) 1861년부터 정기적으로 미국 내전에 관한 글을 쓰기 시작했다. 마르크스의 집에서 미국의 상황은 일상적인 대화 주제였다. 마르크스의 딸 엘리너는 다음과 같이 [어린 시절을] 회상했다. “링컨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다고 굳게 믿은 나는 그에게 장문의 편지를 썼다. [아버지는] 그 편지를 읽고 우체국으로 가져갔다.”

영국의 강력한 “면직업계 이해당사자”들이 남부 노예주를 지원할 명분을 찾아내려 하고 있고, 링컨이 노예제를 건드리기를 주저하는 바람에 전쟁에 명분이 없다는 비난에 힘이 실리던 시점에 마르크스는 예리한 대안적 분석을 제시했다. “남부는 지리적으로 북부와 확실하게 나뉜 영역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하나로 뭉쳐 있지 않다. 남부는 나라도 아니다. 전투 구호에 불과하다.” 링컨이 노예제와 정면대결에 나서든 말든 남부 노예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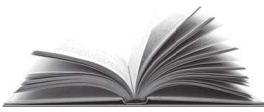
들은 “노예제를 확장하고 지속시키기 위한 정복 전쟁”에 착수할 것이다. 영국에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전쟁을 분석하는 데에 그치지 않았다. 남부연합에 동조하는 [영국의] 대규모 면직 공장 소유주들이 자기 공장 노동자들 사이에서 지지를 이끌어 내려 하자,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제1인터내셔널을 통해 이를 좌절시켰다. 북부군이 남부연합의 항구를 봉쇄하면서 벌어진 “면화기근”은 [잉글랜드] 북부의 면직 공장 지대를 고통에 빠뜨렸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사용자들은 이런 절망적 상황을 남부연합에 대한 지지로 전환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마르크스가 썼듯이 언론들은 “주마다 노동자들에게 [전쟁을] 촉구하는 역겨운 얘기들을 열화와 같이 쏟아냈다.” 그러나 이는 허사로 끝났다. 위기가 끝난 후 마르크스는 기뻐하며 이렇게 썼다. “미국에서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되는 사실이 하나 있다. 적어도 영국 노동계급은 … 그들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국과 영

국 간의] 평화가 위태롭던 시기에 … 영국에서는 전쟁 지지 집회가 단 한 건도 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1864년 링컨이 대통령에 재선했을 때 제1인터내셔널의 축하 서한을 작성한 것은 바로 마르크스였다. “노예주들의 권력에 저항하겠다는 것이 첫 선거 때의 신중한 표어였다면, 이번 재선의 의기양양한 전투 구호는 ‘노예제에 죽음을!’이다.” 북부의 승리가 미국에서 사회주의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환상을 품었던 것은 전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남부가 승리하면 국제적으로 반동이 강화될 것이고, 노예제가 타도되면 미국과 미국 바깥의 노동자들이 더 대답해줄 것임을 이해했다. 전쟁이 끝나가고 노예제가 살아남지 못할 것처럼 보이자 마르크스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거대한 변화가 이토록 빨리 일어난 적은 없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에 이로운 영향을 줄 것이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337호 번역 이원웅



서평 | 《미래가 불타고 있다: 기후 재앙 대 그린 뉴딜》(나오미 클라인, 열린책들, 2021)

지속가능한 세계를 쟁취하려면 어떤 운동이 필요한가

장호중

반자본주의 활동가이자 《노 로고》, 《쇼크 독트린》 등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 나오미 클라인의 2019년작이 최근 번역 출판됐다. 그녀가 2014년에 기후변화 문제에 관해 쓴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도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얻은 바 있다.

《미래가 불타고 있다: 기후 재앙 대 그린 뉴딜》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나오미 클라인이 쓴 여러 편의 글과 이 책을 위해 새로 쓴 서문과 결말이 포함돼 있다. 이 글들은 읽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나오미 클라인의 주장이 기후 운동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운동의 좌경화를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다수의 주류 환경운동 지도자들은 그간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려 왔지만 그 대안은 주요 선진국 지배자들의 점진적 해법에 타협하는 것이었다. 개인적 실천(절약 등)을 강조해 평범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논리를 강화하기도 했다.

그러나 유엔 기후협약은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었던 미국의 탈퇴로 거듭 무력화됐고, 이제 미국의 갑절 수준에 이르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중국은 그에 걸맞은 부담을 거부해 왔다.

일부 환경운동가들은 독일 등 유럽 일부 나라들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자본주의적 제도들을 활용해서 기후 변화를 멈출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용된다.

그러나 나오미 클라인은 이런 주장도 비판한다. “부분적으로 오염을 내뿜는 생산 시설을 중국 같은 지역으로 옮긴 결과다. 연구자들은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된 후 선진국에서 소비되는 상품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량이 선진국들에서 이뤄진 배출 감소량의 ‘여섯 배’에 이른다고 결론지었다.”

개인적 실천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생산 방식을 선택하고 그로부터 이윤을 얻은 기업주들의 책임을 털어 주는 반면 생산 계획에 참여할 수도 없고 생산 과정에서 착취당하며 기후 변화로 고통을 받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은 운동 내 좌파로부터 거듭 비판을 받아 왔다. 나오미 클라인도 그 비판자 중 하나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원자화한 개인의 입장에서 지구의 기후 시스템을 안정화시키거나 세계 경제를 변화시키는 데 막중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은 객관적으로 볼 때 생판 터무니없는 생각이다.”

2019년 멸종반란 운동 등에서 이런 비판적 인식은 큰 지지를 받았다. 그레



2019년 9월 서울에서 열린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회 그린뉴딜 요구는 모두 지지할만한 것들이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려면 자본주의 자체에 도전하는 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미래가 불타고 있다
— 기후 재앙 대 그린 뉴딜

나오미 클라인 지음, 이순희 옮김, 열린책들, 424쪽, 22,000원

타 툰베리 등 이 운동의 대변자들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에 걸맞은 일관된 대안 즉, 급진적이고 신속한 체제 변화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그레타 툰베리

나오미 클라인의 책은 당시 운동의 분위기를 흠뻑 담고 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려면 자유 시장주의 각본에 있는 모든 규칙을 분쇄해야 한다. 그것도 시급하게 분쇄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우리가 겪는 중첩되는 위기들이 실제로는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을, 따라서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지향하는 총체적인 비전을 가져야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기후 변화를 막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회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자는 그린뉴딜이 그의 관심을 끈 이유일 것이다.

그린뉴딜은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1930년대 미국 루스벨트 정부가 추진한 것에 맞먹는 뉴딜(정부의 공공투자) 정책을 재현하자는 것이다. 가족 임금

을 지급하는 녹색 일자리 창출, 재생에너지로 100퍼센트 전환, 양질의 의료보험, 공공주택 보급, 이를 위한 급진적 조세 개혁 등 일련의 급진적 요구들이 담겨 있다.

다만 책이 나온 지 2년이 지난 지금에서 보자면 그의 기대와 바람은 실현되기 어려워 보인다. 나오미 클라인은 “승산이 낮기는 하지만” 당시 청년층의 선풍적인 지지를 받은 샌더스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대통령에 당선하고 상원과 하원까지 민주당이 장악하면 “새 행정부는 구성 첫날에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그녀의 예상 시나리오 중 비관적인 전망이 현실이 됐다.

트럼프의 재선은 막았지만, “고작해야 전면적인 변혁을 추진하려는 용기도 없고 민주적인 사명감도 없는 소심한 민주당 후보가 백악관에 입성하면” 우리는 소중한 시간을 고스란히 날려버리게 될 것이다 … [새] 정부의 4년 임기가 끝나는 해는 벌써 2026년이다. 그때 가서 전환을 시작하자는 것은 터무니없는 소리다.”

바이든은 ‘용기’나 ‘사명감’은커녕 신자유주의를 옹호하고 대자본과 권력층의 이익을 수호해 온 미국 민주당의 주류를 대표한다. 바이든은 민주당 내 경선 당시 그린뉴딜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언한 바 있다.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 그린뉴딜을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실행하리라는 기대는 거의 없다. 바이든이 백악관 공보수석에 임명한 세드릭 리치먼드는 하원 의원 중 석유·천연가스 기업에게서 후원금을 다섯 번째로 많이 받은 인물이다.

나오미 클라인은 자본주의가 문제의 원인이라고 하면서도 그중 한 형태인 신자유주의 비판에 압도적인 강조점을 둔다. “가장 큰 해방꾼은 1980년

대와 1990년대에 일체의 제약을 뿌리치고 세계적인 차원에서 맹렬한 활동을 개시한 자본주의, 일명 신자유주의다.” 그는 국가가 시장을 좀더 통제하고 일부 국유화가 이뤄진 자본주의(예컨대 복지국가)에서는 정부가 그린뉴딜 같은 정책을 통해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듯하다.

신자유주의

사실 그린뉴딜은 그 이름에서 보듯 일종의 케인스주의적 국가 개입 정책을 통해 기후 변화를 막고 일자리와 빈곤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다. 샌더스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등의 그린뉴딜을 단숨에 지배자들의 계략이나 음모로 치부하는 일부 좌파의 입장은 지나치게 종파적인 것이지만, 기존 국가를 활용해 “석유 산업과 국가 간의 확실한 분리”를 이루겠다는 생각은 공상적이다.

순전히 법적인 소유 형태를 잠시 제쳐두고 보면 어느 국가나 ‘전략 물자’인 석유 산업에 엄청난 지원을 제공하고 동시에 커다란 통제력을 행사한다. 석유, 석탄 같은 화석연료가 현대 자본주의 경제의 간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제국주의 열강들은 지난 세기에만 여러 차례 중동 지역에서 전쟁을 벌일 정도로 석유 확보와 이를 통한 패권 유지에 진지하다.

국가 기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정이 결국 자본 축적에 의존할 뿐 아니라 세계 체제 속에서 국가의 위상과 군사력도 경제력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를 운영하는 권력자들도 자본 축적에 이해관계가 있다. 요컨대 국가는 계급 중립적인 기구가 아니다. 그러기는커녕 가장 효과적인 자본가 계급의 지배 수단이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개별 기업뿐 아니라

이런 국가들이 더 빠른 이윤 획득을 위해 경쟁하는 체제이기도 하다.

시장이 국가를 제압했다는 식의 생각은 사실이 아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많은 분야를 좌지우지해 온 자유시장 근본주의”를 추구해 온 것은 다른아닌 국가의 정책 입안자들이었다. 심지어 유럽에서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대거 집권한 1990년대에도 각국 정부는 같은 정책을 밀어붙여 왔다. 이런 경험으로부터 비판적인 문제 의식을 갖고 출범한 그리스의 좌파 개혁주의 정당 시리자조차 결국 같은 길을 걸었다. 거듭 확인된 것은 개혁주의적 정당이나 인물이 국가의 성격을 바꾸기는커녕 국가가 그들을 굴복시킨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국가 자체를 완전히 다른 민주적 노동자 국가로 대체하기 전에는 자본주의의 심장부에 있는 석유 자본가들의 영향력을 제압할 수 없다.

하물며 노골적인 친자본가 정당인 미국 민주당을 통해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완전히 비현실적이다. 사실 샌더스 열풍이 인상적이기는 했지만 노골적인 친자본가 정당인 민주당이 그를 대선 후보로 선택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낙관이었다. 만의 하나 샌더스가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으로 당선됐을지라도 지금 같은 경제 불황 시기에 미국의 계급 세력 균형을 고려하면, 미국 정부가 그린뉴딜 같은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민주당은 자신이 기반을 두고 있는 자본가들의 이해관계를 근본에서 거스를 수 없다.

기후 위기는 진행 중이고 10년 안에 온실가스를 필요한 만큼 감축하는 것은 나오미 클라인의 예측대로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자본주의와 근본에서 다른 원리로 운영되는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려면 일차적으로 자본주의 지배자들로 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운동이 건설돼야 한다. 이 운동은 신자유주의뿐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에 맞서는 운동으로 발전해야 한다.

또한 기층의 독립적인 운동도 성장시키고 정부 참여 등으로 국가도 활용하자는 식의 모호한 정식화를 받아들이셔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은 국가가 때로는 탄압을 통해, 때로는 그 지도자들을 흡수(운동 입장에서는 배신)함으로써 기층 운동을 좌절시킬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게 만든다.

혁명적 좌파는 기후 운동 내에서 이런 논쟁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운동이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동시에 이런 과제를 수행해 나갈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의 조직을 건설·강화해야 한다.

인력충원 제대로 안고 요금 인상에 혈안인 택배사들

신정환

과중한 업무로 인한 택배 노동자 과로사가 계속되고 있다. 노조 집계로만 지난해 16명이 사망한 데 이어, 올해에도 3월 28일 현재까지 5명이 사망하고 4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택배 노사는 지난 1월 말 인력 충원 등에 합의했다. 당시 택배업계 빅 3인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택배 사측은 노동자들의 파업에 밀려 분류 인력 6000명을 충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6000명 충원 규모도 많이 부족한데, 이조차 뭉그적거리며 잘 지키지 않는 것이다.

전국택배노조는 일부 터미널에서 분류 인력이 거의 충원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분류 작업을 하지 않는 대리점 소장이나 사무 보조원을 서류상에만 등록해 놓거나, 택배 기사들에게 분류 인력 조끼를 입혀 그대로 일을 시키기도 한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이다.

문제는 이뿐이 아니다. 택배사들은 1월 말 합의의 당시, 분류 인력 충원에 따른 비용을 택배 기사에게 전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대리점이 택배 기사들에게 비용을 부담시켜 임금을 삭감하는 일도 생기고 있다. 택배사들이 분류 인력 비용 일부를 대리점에게 떠넘기고, 대리점은 이를 다시 택배 기사들에게 떠넘기는 식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과로에 대



역대 최고 수익 내면서 인력 충원 약속 지키지 않는 택배사들 과로사로 올해만 택배 노동자 5명이 사망했다. 한진택배 이천여주지점 노동자들

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등 안전보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만 할 뿐 실제로는 손을 놓고 있다.

역대 최고 실적

그러는 사이 택배사들은 분류 인력 충원 등을 이유로 재빠르게 택배 요금을 인상하기까지 했다.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택배 모두 택배비를 (소형 택배 기준) 150~250원가량 올렸다.

온라인 쇼핑몰 등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그 부담은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공산이 크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온라인 쇼핑몰 법인 판매자들이 무료 배송을 줄이거나, 배송비를 올리거나, 상품 가격을 올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게다가 택배사들이 앞으로 2년에 걸쳐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다.

택배 노동자들은 인력 충원 합의 이행에는 굵뜨면서 요금 인상에는 재빠른 사측을 비판했다. “요금 인상으로 노동자들에게 [처우 개선으로] 돌아오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회사 배

만 불리겠다는 겁니다.”(임현우 전국택배노조 이천한진지회 대의원)

이번 요금 인상으로 택배사들의 수익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CJ대한통운의 경우, 연간 약 1000억 원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난해 영업이익의 3분의 1 수준이다. 약속한 분류 인력 투입 비용 500~600억 원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즉, 택배사들이 분류 인력 비용을 핑계로 택배비를 인상하는 것은 꼼수일 뿐더러, 사측이 마땅히 져야 할 책임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

다.

그러나 코로나19 특수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는 택배사들이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택배사들은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을 냈다. 가령, 업계 1위인 CJ대한통운은 10조 7811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영업이익도 3252억 원에 달했다. 2019년보다 각각 3.5퍼센트, 5.9퍼센트나 오른 수치다. 올해도 코로나19 특수가 이어져 7퍼센트 내외의 추가 성장이 예상된다고 한다.

택배사들은 인력을 대폭 충원하고, 그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코로나19로 저임금층 고통 심한데도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또 억제하려 하다

이정원

내년 최저임금 심의 절차가 시작됐다.

저소득층 노동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임금 소득이 크게 줄었다. 가령, 지난해 하위 20퍼센트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은 2사분기에 17.2퍼센트, 3사분기에 10.4퍼센트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 임시·일용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점을 봐도, 소득 감소를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최저치인 1.5퍼센트에 불과했다.

이런 점들을 볼 때, 내년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돼야 한다.

그런데 사용자 단체들은 그동안 최저임금이 너무 가파르게 올랐으며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경총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들이 늘고 있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이것이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효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임금 수준이 사용자들의 지



최저임금 1만 원 약속은 온데간데 없다 2018년 3월 전국노동자대회

불 능력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주장은 순전히 사용자들의 이윤 추구를 정당화하는 논리이자 위선이다. 이런 식이라면 영세 사업장이나 위기를 겪는 사업장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생계조차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영세한 사업장들에서도 이윤은 고용된 노동자들의 노동이 만들어 내는 것이고, 기업 위기도 노동자 탓이 아니다.

게다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 상당수가 가계 소득을 책임지는 경우가 많은데도 최저임금은 가계생계비 기준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올해 최저임금은 2인 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친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 수가 증가한 것은 기업주들이 법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만 보여 줄 뿐이다. 정

부도 이를 수수방관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해 왔다.

문재인 정부는 진작에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폐기해 버려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바닥을 기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 4년(2018~2021년) 연평균 인상률은 7.7퍼센트로, 박근혜 정부 4년 연평균 인상률 7.4퍼센트와 별 차이가 없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악으로 일부 수당이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실제 인상률은 더 낮을 것이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둔 지금, 문재인 정부는 또다시 최저임금을 억제하려고 한다.

정부가 올해 내놓은 고용·생계 안정 대책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언급이 한마디도 없다. 또, 임기 만료가 다가오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을 연임시키려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들은 지난 2년간 최악의 인상률을 주도한 인물들이다.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어서 민주노총 등이 반발하고 있다.

이는 정부 정책의 핵심 방향이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친기업 정책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등 임금 인상이 기업주들의 이윤 회복에 발목을 잡을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계속 이런 방향으로 움직여 왔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직자 고용유지, 실직·소득감소 지원 등 주요 고용·실업 대책에 사용한 지원금은 고작 4.7조 원에 불과했다. 반면 기업 지원에는 무려 20배에 이르는 91.2조 원이 투입됐다(민주노총). 올해도 정부는 국방 예산은 대폭 늘리고 기업 지원은 지속하면서 노동자 생계 지원은 외면하고 있다.

올해 들어 경제가 회복되는 추세라고 하지만, 여전히 산업 간 격차가 커서 소득 감소로 고통을 겪는 노동자들이 많다.

코로나19 위기 동안 불평등과 빈곤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이윤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 재보선 평가